

“군산서 뜨는 공공앱 ‘배달의 명수’, 서울시 왜 못만드나”

소상공인 중심, 앱 개발 목소리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 앱 귀감 2주만에 1.6만 가입, 2700건 주문
서울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영향
매장 수요 없어 배달서비스 절실
서울시 “플랫폼 구축 검토 안해
소상공인 66만… 접근 신중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슬러져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가 제로인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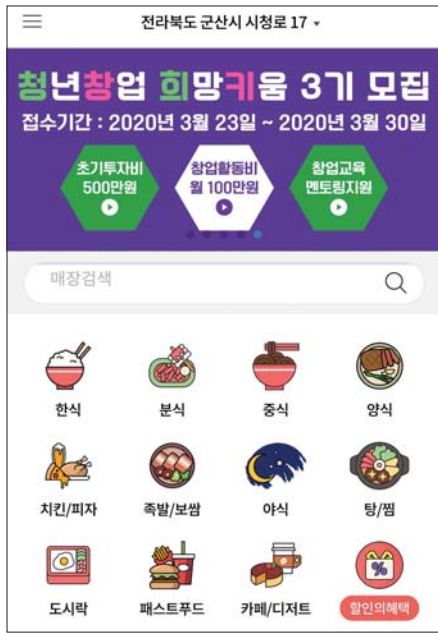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는 공공음식배달 어플 구축과 같은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음식배달 어플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3무(無) 애플리케이션이다. 전북군산시가 이달 13일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였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수 1만6100명을 돌파했다. 주문 건수는 2700건에 달한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홍보 포스터(왼쪽)와 앱 화면.



/군산시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군산에서 모바일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한 공공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제로페이처럼 서울시에서 전국 표준 앱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음식배달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기존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고 배달 어플사의 할인 이벤트 참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과점 상태로 인해 상가 임대료처럼 원치 않는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해야 한다”고 토

로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지역사랑 배달앱 개발에 착수해 3월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음식점주들은 기존 음식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은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8%의 할인 혜택을 받는 상생어플이다.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원래 시장님 공약 사항이 지역 내 종합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 음식배달앱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됐다”며 “현재 앱이 나온 지 보름 가까이 됐는데 음식점 사장님들도

소비자들이 배달의 명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료나 음식 주문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경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향후 해당 앱에 병원 예약 기능 등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 플랫폼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 서상철(가명) 씨는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인수하고 배달의 민중까지 인수 합병을 하면서 우리 내수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외국 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장모 씨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은 플랫폼 독점이라는 4차 산업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 배달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배달앱 이용 점유율이 중심이 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에 인계해 경영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현재 공공배달앱 개발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에서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에만 66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고 배달서비스를 공공앱으로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식품위생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0일 서울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 (132곳) 많은 1600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이달 문을 닫은 점포 중에는 2008년 이전에 개업한 식당도 114곳이나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까지 견뎌냈던 점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지 않고 전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배달앱을 대기업, 자본을 가진 회사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면 미국보다 소상공인이 4배가 많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교수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같은 SNS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중간에 수수료를 떼이지 않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현금 지급보다는 플랫폼 시스템 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노후주택 정비사업 대상확대·규제완화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 자치구 건축위 심의절차 등 생략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단독·다세대주택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건축규제완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

원구역에만 규제 완화를 인정했다.

주택 수를 늘리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해 추진 절차도 간소화했다.

강명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창작연극지원센터 조감도.

/서울시

대학로에 창작연극 지원센터 들어선다

서울시, 2022년 완공목표 착공

서울대학로 인근에 창작연극 활성화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구 동소문동1가 일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가칭 ‘창작연극지원센터’를 짓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작연극지원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24㎡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로 총 348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종로구 동승동·연건동·이화동·해화동 등 대학로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연극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7년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성북구 소재 운생동건축사무소의 설계안이 채택됐다.

최신 장비와 조명과 함께 측무대·후

무대가 설치돼 모든 장르의 연극을 실현할 수 있는 250석 규모의 연극 전용극장,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실험해 볼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이 조성된다.

또 창작연극 기획 업무에 쓰일 사무실과 회의실, 공연의 규모에 맞는 연습이 가능한 연습실(대 1, 중 3, 소 1), 리딩룸 4개 등도 생긴다. 지역 주민들과 연극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편의시설도 건립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센터는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연극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센터 건립으로 연극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학로 소극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

신도명단 허위제출 등 방역에 혼선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지역 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루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26일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고.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며,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파파라치 학원장 등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를 팔아 수익을 올려 온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8월 소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토록 유인하고 이 중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당 160만원에 판매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었다. /김현정 기자